

## 모라토리엄(대외 채무 지불 유예 · 중단)

김연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외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연말 우리 경제는 모라토리엄 즉, 대외 채무 지불 유예 선언이 임박했다는 우려로 전국민이 긴장했던 적이 있다. 연말까지 갚아야 할 외채는 200억 달러에 이르는데 달러 공급은 거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은 채권국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겠으니 당분간 빚 돌려받을 생각을 말라고 선언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었다. 다행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표된 국제 기구와 선진국들의 조기 자금 지원 약속과 국제 채권 은행단의 대출 만기 연장이 있는 뒤 모라토리엄 공포는 불식되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또 다시 국내 관련 업계와 금융 기관들이 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가 심각한 외환 부족 사태로 외국에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될 경우(대외 지급 불능) 채무 당사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 거절(Repudiation) 또는 채무 재조정(Restructuring)이다. 지급 거절이란 외채 상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모든 대외 거래를 중단하고 폐쇄경제체제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과의 거래없이 당해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생산·소비 활동을 영위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경제 활동의 마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조치이다. 따라서 대외 지급 불능 상태에서 지급 거절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국을 막으려면, 채권국들에게 자국이 채무 상환 불능 상황(Insolvency)임을 공표하고 채무 재조정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이 과정에서 채권단이 채무 재조정 요청을 거부한다면, 채무국은 채무 불이행 상태(Default)가 되어 지급 거절과 똑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

채무 재조정 방법에는 대외 채무 지불 유예·중단(Moratorium), 채무 상환 연기(Rescheduling), 채무 재협상(Renegotiation), 재융자(Refinancing), 채무 삭감(Debt Reduction) 등이 있다. 대외 채무 지불 유예·중단(Moratorium)이란 외채 원리금을 일시적으로 지급 중단하는 방식이고, 채무 상환 연기(Rescheduling)는 기존 외채의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채무 재협상(Renegotiation)은 금리 또는 가산 금리의 조정과 같은 채무 상환 조건을 변경시켜주는 방법이며, 재융자(Refinancing)는 상환하지 못하는 원리금을 추가 대출금으로 간주하여 차관 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채무 삭감(Debt Reduction)이란 외채 원금을 삭감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채무 재조정 방식은 한 가지만 이용되기 보다는 대외 채무 지불 유예·중단(Moratorium)과 여타의 방식이 혼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이들 채무 재조정 방법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채권단과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외 채무 지불 중단을 선언하면

채무 불이행 상태(Default)와 똑같은 결과를 빚게 된다.

정부가 대외 채무 지불 중단(Moratorium)을 선언하면 채무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중재 아래 소위 '파리클럽'(Paris Club)이라 불리는 서방 채권국들과 구체적인 채무 재조정 협상을 벌이게 된다. 반면, 일반 기업이나 금융 기관이 대외 채무 지급 불능에 빠져 지불 중단을 선언할 경우에는 국제채권금융단의 모임인 '런던클럽'과 협상을 한다. 통상 대외 채무 지불 중단(Moratorium)이라 함은 전자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공 채무 또는 국가가 지급 보증한 채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80년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의 외채가 정부 부채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유 외환 부족 사태가 곧바로 모라토리엄 사태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외채는 대부분이 민간 외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 외환 부족 사태가 곧바로 모라토리엄 사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동남아 국가들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정부

가 민간 외채를 지급 보증하거나, 외화 표시 부채를 자국 화폐 표시 부채로 전환하거나, 또는 민간의 지분과 외채를 인수하는 방식 등을 통해 민간 외채를 정부 외채로 전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단 모라토리엄이 선언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당해 채무국이 국제 사회에 대한 자국의 모든 금융적 의무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국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국의 모든 해외 자산을 동결시킬 뿐만 아니라, 채무국과의 수출입 거래를 거부하게 된다. 제3국과 수출입 거래가 성립될 경우에도 채무국의 입장에서는 외화 현찰이 없기 때문에, 물물 교환 방식의 무역 형태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당해 채무국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이 풍부할 경우는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일 경우 당장 국내 생산이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이에 따라 급격한 물가 상승과 대량 실업이 발생하며 사회 전체는 사재기, 폭동 등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파장은 국제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데, 채권국 금융 기관들의 부실 채권 급증으로 인해 채권국의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국들의 대외 채권 회수가 이어져 여타 외환 위기국들도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모라토리엄 가능성으로 인해 이 지역에 막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국내 금융 위기가 더욱 심화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주변 동남아 국가들도 외환 위기가 심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도 당장 이들 국가에 대한 대출금 및 수출 대금 회수가 불투명해지고, 현지 투자 기업의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IMF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급 대책반을 현지 급파했으나, 이 사태가 전 세계적인 금융 공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